

# 獨, 진실성 있고 청문결과 의문 없으면 '병역거부 인정'

##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上〉 독일·대만 사례 살펴보니

**독일** 1983년 '관련법 제정' 후 90년대 49만명 규모 군대 보유

**대만** 2000년 대체복무제 도입 종교·가정·일반 등 사유 다양

최근 대법원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정 종교 특혜 주장부터 양심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갈등의 활화산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3회에 걸쳐 이번 논란의 주제인 ▲양심 측정 문제 ▲대체복무 기준 논쟁 ▲현역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를 검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선고 내용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의 상고심을 파기 환송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실한 양심을 소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검사에 제시하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이 제시한 방법은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검사가 병역 거부자 개인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과제로 남았다.

### ◆'양심' 요건 완화된 독일

우리보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독일은 1983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을 제정한 뒤에도 1990년대까지 40만~49만명 규모의 군대를 보유했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따르면, 통일 이후 독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

정비율은 90%로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비율이 각 50%씩이었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대체복무 역사는 50년이 넘는다.

독일의 병역거부자는 연방가족부 산하 연방대체복무청이 판단했다. 신청인은 지방병무청을 통해 병역 거부 신청서와 이유서, 이력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헌법상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원용하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어휘와 제목,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판단 과정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병역 거부 동기에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사유 등으로 다양했고, 신청자가 양심적 결정 이유들을 별도로 심사받지 않았다고 심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방대체복무청은 서면 요건과 병역 거부 동기, 신청인의 진실성에 문제가 없거나 청문 결과 의문이 남지 않으면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만약 의문이 남은 경우, 신청인은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구두 청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청이 기각되면 행정 소송도 가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심사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 ◆복잡하지만 객관적 기회 넓은 대만

대만은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이곳의 대체복무 신청자격은 ▲종교적 사유 ▲가정 사유 ▲전문기술자격 소유 ▲장기간의 자원봉사 실적 ▲일반 자격이다.

우선 종교적 사유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종교에 2년 이상 속했고 심리적으로 현역상비군 역할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신청 시 이유서와 이력서, 서약서와 종교에서 발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가정 사유의 경우, 병역 대상자가 족모 두 65세 이상 또는 15세 이하이거나 심신장애 등 질병이 있어야 한다. 이미 결혼한 신청자가 15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제외하면 가족이 없는 경우도 여기 속한다.

대체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증명이나 관련 학력, 경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자격을 가진다.

만 1년 동안 자원봉사 150시간을 넘기고, 각종 봉사 실적 증명서를 가진 이들도 관련 기관에서 대체복무 할 수 있다. 이들 사유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닌 내무부가 대체복무를 심사한다. 우선 3개월 안에 심의 위원회를 소집해 심의를 마친다. 신청자의 신앙과 동기, 심리 등 이유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면담도 이어진다. 또한 소속 종교 책임자나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 안전에 의문이 있거나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신청인을 관찰할 수 있다. 2000년~2017년 종교적 사유로 대체 복무한 사람은 852명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77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불교는 60명에 그쳤다.

심 연구원은 연구에서 "종교적 사유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지만, 비종교적인 사유를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은 비종교적인 사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유 또는 자격을 갖추어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며 "대만의 입법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joker@metroseoul.co.kr

# 文 대통령 “정부·여야, 국민 삶 개선에 초당적 협력”

## 文-여야, 상설협의체 첫 회의

규제혁신·소상공인 위한 법안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협력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저소득층 지원위한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예산 확대,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위한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규제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뜻을 모으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4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대변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혁명 관련법 등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추산·육아 관련 예산 확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동수당법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윤 대표는 또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지는 의견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역시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아울러 각당 원내대변인,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각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오전 11시22분부터 오후 1시까지 98분간 회의를 했다.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은 60분 가량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해수부

완도어업정보통신국 개국

해양수산부는 서·남해안지역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하고 6일 개국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의무설치 어선이 총톤수 5톤에서 2톤 이상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록어선척수가 가장 많은 전남(2만6939척) 서·남해 지역의 통신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선 안전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하게 됐다.

완도통신국은 국비 20억, 지방비 3억, 수협 8억 등 총사업비 약 31억 원을 들여 완도군 군외면에 대지 507평(1678.7㎡), 지상 2층 연면적 259평(843.45㎡) 규모로 지어졌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농식품부

농어촌인성학교 추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농어촌 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전국 13개의 마을·권역을 '농어촌인성학교'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2012년에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인성학교'를 공동 지정·관리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까지 6차에 걸쳐 119개 마을권역을 지정한 바 있다.

농어촌인성학교는 지난해에만 총 4527차례, 14만1000여명의 청소년이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선정된 곳 중 충남 금산의 닥실마을은 우수한 교육 및 숙박 시설, 천내습지 탐사와 금강 용화 여울건너기로 마음순화, 슬비람길과 용화순례길 트래킹으로 체력단련, 생태미술을 통한 미술치료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세종=최신용 기자

# 文 대통령, 5박6일 일정 13일 싱가포르行

## 韓-아세안 정상회의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6일 일정으로 13일 출국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 투자 확대 및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변인은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